"지역인재 채용 권고사항 준수해야"

유성엽 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4명중 1명도 안 돼" 비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권고사항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18년 혁신도시 이전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이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제주가 각각 19.5%, 19.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대구로 이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66.7%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0%로 가장 낮았다.

혁신도시법에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2018년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18%, 2019년 채용률은 21%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인재의 채용을 35% 권장한 공공기관 인력관리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균등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이 4명중 한명도 안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권장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정책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재부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 혁신도시 이전 기업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의사면허는 성역?… 성범죄 의사 611명 · 자격정지 '4건'

강간 · 강제추행 88%로 가장 많아… 불법촬영도 해마다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강간과 불법영상물 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611명에 달했지만 자격정지 처분은 1%도 채 안 됐으며 그나마 1개월 정지가 전부였다. 이에 성역이나 다름 없는 의료인 면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이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성범죄자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으로 집계됐다.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지난해 16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특히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다 검거된 의사가 71.5%(14→24명) 급증했으며 강간·강제추행 의사 수도 121명에서 136명으로 12.4% 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이어갔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 74명 중 성범죄가 사유로 명시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 모두 정지 1개월 처분이었다.

자격정지 사유를 들여다보면 3명은 유사 강간행위, 간음, 강제추행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명은 불법촬영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자격이 한 달간 정지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상엔 불법촬영 등은 빠져 있다.

게다가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어렵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면허를 취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박능후 "요양병원 화재안전… 재발방지 대책 수립할 것"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11월까지 두 달간 요양병원 특별조사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부터 요양병원 화재 안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두 달간 소방청 협조를 받아 민관 합동으로 요양병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이어 12월에는 김포 요양병원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일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시도 과장급 회의를 통해 소방청, 지자체 등과 1582개 요양병원 소방시설 전수점검을 이달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청,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요양병원협회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유가족·부상자 등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화재사고 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부상자 치료, 이송 지원, 사망자 장례·피해자 심리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광역 및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심리지원팀을 구성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기술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전국 긴급 실태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저출산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내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 "공공보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해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동수당 대상 확대와 아동보호체계 개편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으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계획 등을 밝히고 건강보험 정 지출 효율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주민건강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뉴시스

조명래 "돼지열병, 상상못한 매체 통한 전파 가능성 검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매체를 통해 전파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및 확산 원인에 대해 질문받고선 "정부의 조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상당히 강도 높았다"면서도 "(그간 국내에서) 발발하지 않아 그 강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파주에서 최초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총동원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염 경로와 원인을 찾고 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표현을 빌자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존의 연구결과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기 발병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는데다 발발의 공간적 패턴과 전파 양상을 볼 때 임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 하천수나 날짐승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등 상상하지 못했던 매체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야생동물 질병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직 전담 인력이 7명에 불과해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행안부와 협조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직제 협의를 다시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에 납 성분 함유량이 '제로(0)'인 친환경 제품만 사용하도록 환경보전법 시행령도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우리지역 적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지역 적폐는 무엇인가'

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춘)는 지난 2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우리지역 적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덕춘 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점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것이 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길이다"며 "전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적폐를 지적하고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적폐는 정치부분에 있어서 패거리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심에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지역정치적폐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패널의 자발적인 참여로 열렸으며 앞으로 이날 나온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음 토론회는 오는 11일 '우리지역의 교육적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文 대통령, 오늘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오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지난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회동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에도 청와대 초청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경기 부진 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수출 부진과 마이너스 물가로 '경제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을 놓고 경제계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등 외교·안보 현안에 무게가 실렸던 만큼 귀국 이후에는 경제와 민생 행보에 비중을 두고 일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던 지난 7월에도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

/뉴시스